

高油價/開放化 시대의 석유산업의 과제 및 대응전략

安 柄 勳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

I. 석유산업 주변환경의 변화

1990년대 석유산업의 국, 내외적 환경변화를 집약하여 표현하면 고유가시대, 개방압력 증대의 시대 및 환경규제 압력 강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시대가 지속되어 세계경제가 회복되었고, 유류수요도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반전되어 1990년대 중반에는 제3의 석유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89년말에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90. 8. 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페르시아만 사태는 원유가의 폭등을 초래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나 예고되었던 석유위기를 현실로 앞당기고 말았다.

페르시아만사태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 비관론이 맞서고 있으나, 사태가 안정되더라도 '80년대 중반의 저유가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고유가시대에 국내 석유산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 주요 1차에너지원인 석유제품의 안정·경제적 공급에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석유산업 환경의 주요변화의 하나는 급격한 개방압력의 대두이다. UR협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국내시장의 개방압력은 석유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기간산업으로써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받아오던 석유산업도 서비스(유통)분야를 시작으로 외국의 선진 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내 석유산업은 민영화이후 경영합리화를 추구하여 많은 부분 경쟁력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유통단계별 진입규제 및 가격규제하에서 운영되던 경영체질로 인하여 개방화도래에 따른 새로운 경쟁환경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90년대 석유산업이 당면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환경 규제 압력에의 효과적 대응이다. 최근의 환경문제의 추세는 대기오염, 수질오

〈표-1〉 페르시아만 사태 전후의 국제 원유가격 추이

(단위 : \$ / B)

	1989 평균	1990. 1 / 4	1990. 2 / 4	페르시아만 사태이후		
				8월	9월	10월
두 바 이	15.70	16.63	14.02	25.06	30.41	31.52
브 렌 트	18.20	19.77	16.35	27.36	35.08	36.06
W T I	19.60	21.57	17.44	27.56	34.39	36.11

〈표-2〉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진행 추이

주요 내용	
1986. 9	GATT 각료회에서 제18차 다자간 무역협상개시(우루과이 라운드)
1988.12	몬트리올 각료회의 개최
1989.12	서비스 협상그룹(GNS) 잠정안 작성
1990. 7	GNS의 서비스협상 초안 완료
1990.11~12	브루셀 각료회의 개최 및 UR/서비스협상 종료
1991. 1	서비스 협정(GATT) 발효

염 등 국지적(Local) 환경개선 차원뿐 아니라 오존층

파괴, 산성비, 지구온난화등 전지구차원의 「지구환경문제」로까지 걸치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더구나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Green-house Effect) 를 둘러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규제 움직임은 동사안을 선진공업국에서 외교·정치문제로 사용할 전망까지 보이고 있어, 자원빈국이면서도 에너지존형 공업국인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 11월초 제2차 세계기상회의에는 한국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 분야의 국제적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책 수립의 움직임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 하겠다. 에너지산업에의 영향이 가장 심각할 것은 재론의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표-3〉 주요 국제 환경회의

	주요 국제회의	주요 내용
1988. 6	지구환경 국제회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모색
1990. 6	세계 환경회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전세계의 전략 구상
1990. 8	제4차 IPCC회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종합 기상보고서 제출
1990.11	세계기상회의	CO ₂ 배출 규제기준 설정
1992.	제2차 UN 환경개발회의	CO ₂ 감축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

II. 석유산업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이러한 여건변화하에서의 대응방안은 석유산업차원과 정책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다.

1. 석유산업 대응전략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대응전략]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고유가시대에 국내 석유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소요 원유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제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차원의 대응책은 여러 기회에 거론되었으므로 개략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는 이미 전부터 계획추진중인 정제설비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유가격이 강세로 돌아서고 국제시장에서 원유공급이 팽박해지면 중·경질 원유간의 가격차이도 확대되게 된다. 장기적으로

수요의 경질·저유황화 추세와 공급원유의 중질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도 정제설비의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중·경질 원유간의 가격차이가 확대되는 고유가시대에 경제적 원유조달을 위한 선택의 여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도 정제설비 고도화 투자가 요구된다.

국내 석유산업의 경우 정유5사가 모두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 등 고도화설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설비투자의 조속한 진행을 통하여 고유가시대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원유의 자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고유가시대의 원유공급의 안정성제고를 위해 원유의 자급능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2001년까지 국내 소요 원유의 20%선인 30만B/D 달성을 목표로 국내·외 유전개발을 장려하고 있고 국내 정유사도 '80년대에 들어와 해외 유전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유의 자급능력은 향후 상당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유전개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신규 유전의 탐사,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유전의 인수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표-4〉 국내 정유사 해외유전개발 현황

油 公	湖南精油	京仁에너지
에콰도르 B-12	美國 육·해상	인도네시아 와림 에콰도르 B-13
말레이시아 SK-7		
인도네시아 와림		
호주 AC/P-11		
이집트 자파라나		
미얀마 옥상BLOCK-C		
아랍에미레이트 RAS AL KHAHAM		

(주) 1. 자료원 : 석유협회보 1990. 10

셋째, 작금의 고유가 및 급변하는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중요과제로서 원유구매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원유 시장이 약세일 경우에는 추가조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도 소요원유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으나 시장이 팽박해지는 경우 정보력등에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열위인 경우에는 소요원유 확보시 트레이더의 손을 거치게 되고, 결국 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 정보망의 확충 및 트레이딩기능의 활성화등을 통하여 구매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 석유산업 개방과 관련한 대응과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부문협상과 관련하여 제기된 국내석유산업의 개방압력은 기존 국내 석유산업의 경영 환경이 정부의 규제틀하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더구나 국내 석유산업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소비자등 유통구조가 다단계화 되어 있고, 단계별로도 진입규제가 설정되어 왔기 때문에 개방압력의 대응과 관련하여 개방수준 및 절차를 둘러싸고 업계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등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석유산업의 개방은 이번 협상과제가 서비스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석유산업의 자유화·국제화에 관련이 되어있는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원천적인 대응에는 우리나라 석유관련산업의 체질강화에 도움이 되는 제반 방안들을 포함시켜야 하나, 우선 가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석유제품 유통단계의 대형화 및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선진 경영기법과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외국 석유기업이 국내 석유산업에 진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역시 취약한 국내석유류 유통구조로 인한 대응력의 약화에 있다는 데서 필요하다.

둘째, 이와 병행하여 서비스수준의 향상 및 경영다각화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주유소등 최종 유통단계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준 및 마케팅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수년간 국내 주유소의 서비스 수준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가 외국의 진출기업의 서비스에 접할 경우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개방 이전에 외국기업의 사례분석등을 통해 국내 주유소 시장의 마케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편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유류 판매수입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므로 비유류 판매수입의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업차원뿐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에너지시장하에서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담당하여야 하는 국내산업의 체질강화라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도 필요한 방안이라 하겠다.

셋째, 외국기업의 침투에 대한 방어적인 자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내 석유산업도 국제화를 추진하여 해외에서의 국제경쟁력확보를 노려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개방압력이 서비스/유통분야에 집중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석유산업 전체의 개방화 요구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석유산업은 전통적으로 소비지 정체주의 원칙하에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외국으로 적극 진출하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제]

비단 석유산업뿐 아니라 모든 에너지산업에 있어, 공해 및 환경관계 요인의 중요성은 재론의 필요가 없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석유산업에 여러형태의 제약요인

으로 대두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주는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제약요인으로서의 국내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석유류 연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저감을 위한 저유황 연료유 공급능력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유황 연료유 공급의 확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유황원유의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저유황 원유 공급에 한계가 있고 또한 고유가 시대에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크게 불리하므로 탈황시설의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 석유산업의 경우, 탈황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또한 저유황 제품의 가격이 탈황시설의 투자경제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환경규제 강화시 기업의 생존전략을 위해서도 탈황시설의 건설 및 확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환경규제강화와 더불어 이미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차원의 이산화탄소배출 제약에 관한 국제협약의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 연소시 불가피하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제한하면, 결국 이는 화석연료비를 제한하는 셈이므로 국내 에너지의 50%를 상회하는 석유류의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전세계 二酸化炭素 放出量の 50~60%는 石油, 石炭 및 가스의 연소에서 발생하므로, 예상되는 국제간 협약을 감안할 때, 일부 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90년대 에너지수급상의 최대변수로서 환경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石油産業의 최대과제중의 하나로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석유산업은 이산화탄소 국제협약의 전개를 시나리오로 하는 상황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90년대에는 정제설비, 수송설비, 고도화설비등 대형투자계획들이 포진하고 있는 바, 늦어도 '95년까지는 체결시행될 지구온난화 관련 국제의정서의 향방을 가늠하여, 이들 대형 설비투자계획의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石油産業에서만이라도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서의 틀을 재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여러 국제회의에서의 논의와 최근의 제2차 세계기상회의에 제출된 IPCC의 중간보고서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산화탄소배출의 주범인 에너지부문에서의 대응방안으로서는 결국 일차적으로 에너지 전환 및 이용효율향상을 우선적인 과제로 하고, 이와 병행하여 천연가스등 이산화탄소원단위가 낮은 에너지로의 전환, 더 나아가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등 비화석연료의 도입확대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과거와 다름없이 중요하지만, 계통운영차원과 신규부지확보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며, 더구나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미 입지 확보상의 어려움이 재확인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석탄발전은 이산화탄소원단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기존의 연소방식으로는 소비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결국 에너지 효율향상, 천연가스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의 비중증가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이용이 주요관건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석유산업은 수요증가에 한계가 있는 석유류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연료공급기반의 확충, 절약기술 및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등 종합에너지회사로서의 전환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시스템차원의 효율향상을 위해서 열병합발전, 지역냉난방사업 등 분산형에너지공급시스템의 확대보급이 요구되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도 경영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위 차별화전략에 어긋나므로, 각개 업체마다의 보유자원과 특성에 따라 focused된 다각화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석유산업은 단기적인 문제의 집착보다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걸맞는 장기경영계획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2. 주요 정책과제

앞에서 논의한 석유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들과 병행하여, 정책당국 또한 국가에너지수급차원의 대응방안이 정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유가시대, 개방화압력의 구체화 및 국제환경규제움직임등이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발생사안들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결국 정책당국이

지원하여야 할 것은 지엽적인 직접지원보다는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책당국의 규제 및 지원책은 결과적으로 국내업계의 체질약화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90년대 국내 석유산업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석유산업의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유가시대의 대응과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석유산업과 관련하여 볼 때, 역시 석유 제품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제설비 고도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원유/제품의 적정수준의 비축을 시행하여 석유시장의 단기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정제설비고도화 투자는 고유가시대에 특히 요구되는 것인만큼, 석유사업기금등에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사업기금 본래의 취지에도 보다 부합된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보유중인 기금재원의 활용계획도 재정립하여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안정·저가공급 목표에 용도를 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금과 연계시킨 유가정책에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물론 가격정책이 지금까지 물가당국의 경제전반적인 물가 방패막 차원에서 결정된 감이 없지 않으나, 최근의 에너지과소비로 인한 유가의 적정선여부는 상당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석유류제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의 구조적인 변화가 그때 그때 반영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역할이란 국제가격의 급변에 대한 완충이지 유통가격을 일정기간 수평선에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정기간 국제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를 동결하는 것은 결국 국내소비자에게 국내시장의 신호를 차단하고 가격을 통한 에너지소비절약기회를 지나쳐 버리는 격이 된다고 하겠다. 더구나 일정기간 동결후에 「몰아서 올리기」는 결국 '70년대의 쓰라린 경험을 자초하는 셈이 될 것이다. 국제시장가격이 오르면, 경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나누어서 이를 구조적으로 적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석유사업기금에서의 보전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개방화시대의 정책과제]

개방화시대의 정책과제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과제는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화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화의 추진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개방화압력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단계별 방안이 제시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그동안 석유산업 자율화의 추진방법 및 추진속도에 관해서는 국내 석유산업의 대응능력을 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한 의견이 있었으나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석유산업 관련 정부규제의 대폭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정부도 산유국 및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표-5>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석유정제시설 및 시설개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석유 수출입업 등록제의 도입
- 석유의 수출입 승인
-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 부과
- 상표표시제 도입

그동안 검토되고 현재 추진중인 자율화방안 자체에 대한 개별검토는 본고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단지 이제까지의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진척이 없다가 이제야 서두르게 된 주요인을 앞으로의 방향설정이란 차원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우선, 석유산업의 자율화추진은 소위 규제경제학자들의 지적을 빌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에서는 집단이익차원에서 검토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기업입장에서는 신규경쟁자의 진입저지의 차원, 정책당국은 규제업무의 지속적인 확보의 차원에서 현재의 규제제도의 대폭적인 전환을 유보해 오지 않았는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 석유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율화란 제반 규제를 풀고, 모든 것을 (기

존)업계에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최근의 규제이론에 의하면, 규제정책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산업에 경쟁적인 요인을 가능한 한 많이 도입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행정일변도의 규제, 또는 규제라는 이름하에 (구조적 취약화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지원책등은 이제 국내 석유업계의 체질강화차원에서 효율적이지 못함은 이제 자명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화의 추진이란, 업계에의 일임이 아닌 새로운 형태, 즉 업계의 경쟁적 구조를 부양시키는 제반 유인책을 정립추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석유사업법개정안에는 개방화에 대비하여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제등 진입장벽의 일부강화가 첨가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이 국내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의 본격적인 침투이전에, 경쟁요인 증대를 통한 기존 업계의 체질강화에 차질을 주도록 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석유산업 자율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율화 추진의 효과와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이, 과감한 자율화추진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가격규제, 진입규제, 이익규제등 각종 규제하에서 운영되어온 석유산업의 자율화는 자율화이후 불확실성의 증대로 자율화 본연의 취지인 소비자 잉여의 극대화, 경쟁원리에 의한 석유류 공급비용의 절감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석유산업 자율화가 정부의 수수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의 Rule Maker로서의 더욱 고도화된 정책수립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때 과점산업의 자율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연구자의 한사람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규제 강화시대의 정책과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석유부문이 당면한 환경문제는 국내환경문제 및 국제환경문제 양변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한다. 황산화물을 중심으로한 국내 환경문제 대응정책은 저유황제품의 공급확대, 이를 위한 투자지원, 저유황유공급을 촉진하는 가격정책등 여러가지 고려될 수 있겠다.

국내 정책당국이 아직 충분한 정책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국제환경문제가 오히려 증장기적으로 더욱 큰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 연소시 불가피하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제한하면, 결국 이는 화석연료소비를 제한하는 셈이므로 국내 에너지의 50%를 상회하는 석유류의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전세계 二酸化炭素 방출량의 5~60%는 石油, 石炭 및 가스의 연소에서 발생하므로, 예상되는 국제간 협약을 감안할 때, 일부 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90년대 에너지수급상의 최대변수로서 지구환경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이산화탄소 국제협약의 전개를 시나리오로 하는 상황적 석유류수급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90년대에는 정제설비, 수송설비, 고도화설비등 대형투자계획들이 포진하고 있는 바, 늦어도 '95년까지는 체결 시행될 지구온난화 관련 국제의정서의 향방을 가름하여, 이들 대형 설비투자계획의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업계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계획은 비단 석유부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나, 국내에너지소비의 5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은 이제까지의 홍보차원이나 계몽차원의 전시적 절약시책에서 벗어나 과감한 가격정책과 에너지시스템 전체의 총체적 절약을 목표로 증장기적으로는 사활의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이용효율향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최근의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표-6> 정부의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 기본방향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소비 억제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 2. 에너지 가격정책을 통한 소비절약 유도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시스템화 실현 4. 원천적 절약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5. 집단 에너지 공급체계의 획기적 확대 6. 절약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의 강화 7.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절약운동의 전개 |
|---|

이와 병행하여 천연가스등 이산화탄소원단위가 낮은 에너지로의 전환, 더 나아가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연료의 도입확대등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종합수급전략의 수립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종합수급전략에는 어느 때보다도 절약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등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 기술개발전략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석유산업 및 관련 에너지산업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규제를 둘러싼 국제협약등 국제적 움직임에 외교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협약 실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정부, 학계, 업계가 범국가적으로 협력하여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규제강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석유사업기금제도를 확대개편하는 『화석연료기금(Fossil Fuel Fund)』 또는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다. 지구환경문제, 특히 이산화탄소방출의 규제움직임은 결국 석유제품뿐 아니라 석탄, 가스등 여타 화석연료에도 공히 적용되므로,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기금제도가나 탄소세가 거론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비한 재원충당의 차원에서, 또한 화석연료소비의 억제용 가격정책으로서, 더 나아가 관련 기술개발자금의 재원으로서는 이러한 기금제도의 도입은(5년이내에)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석유사업기금의 경험을 활용하여, 관련법규, 용도, 조성방법등 사전적인 검토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탄소세를 법제화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은 선진국, 신흥공업국 불문코 대두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Ⅲ. 맺는말

페르시아만 사태로 야기된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정 및 고유가 사태의 도래, 1990년말을 한도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개방압력의 증대, 1992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CO₂감축에 관한 국제협약체결등 국내 석유산업은 '80년대와는 판이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대응능력이 신장될 여유를 주지 않고 급격히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석유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소비자, 정유업계, 정부등 모든 관련 당사자가 힘을 합해 장·단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소비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의 추진등이 시행되어야 하고, 생산 및 공급부문에서는 설비 경쟁력 및 구매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급비용의 절감을 추진하여야 하며, 유통부문에서는 서비스수준의 제고와 대형화/합리화의 추진을 통하여 외국기업의 진입에 대응하여야 하며, 정부는 석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체계를 정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도서안내 □

석유의 이해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